대기업 축산업 진입규제 폐지 관련 논의와 전망

작성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우병준 부연구위원

□ 규제 폐지 관련 국경위 보고내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보고내용 중 농업 분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이 포함됨.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 이유로는 기술 및 경영혁신, 계열화 등을 통한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며, 영세적인 축산 규모로는 녹색성장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현행 축산법(제27조)은 일정 규모(모든 500두 이상의 양돈업,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 대기업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임.
 -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내 14개 기업집단(현대자동차, LG, 삼성, 롯데, SK, CJ,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두산, STX, 신세계)이 있으며 총 62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음.

□ 과거 규제 도입 배경과 관련 논의 전개

- 대기업의 축산업 직접 참여가 금지된 것은 1989년부터로 당시 돈가 폭락에 따른 국내 양돈농가 보호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소(한우)와 낙농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
 - 1999년 시행규칙을 통해 종돈·종계업과 양돈 계열화를 통한 간접참여는 허용되었음.
-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 규제 이후 시장 개방 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제 5단체와 재경부, 관련 학계 등에서 해당 법조항의 삭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규제 철폐의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있음.

- 축산업의 전업화가 일정 수준 진전되었으며 환경 규제와 지역민원 문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신규 진입이 어려우므로 형식적인 법제화임.
- 한·육우와 낙농업에는 참여제한이 없으나 양돈·양계업에만 진입 제한을 두는 것은 축종간 차별임.
- 외국 기업이나 자본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농림부는 1999년 대기업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었음. 2002년에도 대기업 축산업 진출규제 철폐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가축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돈업계의 반발로 인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 규제 철폐에 대한 찬반양론

○ 규제 철폐 찬성의견의 경우 경쟁을 통한 축산업 발전 차원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축산기술의 향상과 인재 양성 등으로 국가 차원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해외 다국적기업에는 참여기회를 열어 놓은 반면 국내 대기업에는 차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 일반농가 및 조합 중심의 계열화와 대기업의 계열화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축산농가의 전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규제철폐로 인한 농가의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임.
- 규제가 철폐되어도 일반 기업의 축산업에의 신규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선 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임.

○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다양한 반대의견을 제시하

고 있음.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에 의한 사육두수 증가와 이로 인한 공급과잉 발생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농가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축산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우려가 있음.
- 축산업에서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기존 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전업농 육성 정책의 적극 시행으로도 효과 달성이 가능함.
- 대기업 하청 형태의 농가는 자율성이 떨어지며 농가소득도 낮아지고, 대기업 철수 시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 진출이 필요한 분야는 사육 부문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시간투자가 요구되는 육종분야임.

□ 규제 철폐 관련 전망

- 규제철폐와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크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축산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찬반양론의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현실임.
 - 양돈·양계 분야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은 축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 이미 1999년과 2002년의 경우 대기업 참여 규제철폐에 대한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선례가 있음.
- 현재 양돈·양계업의 경우 농가의 전업화와 산업의 계열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음. 따라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현실화되어도 서로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됨.
- 규제철폐에 대비해 기존 축산농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의 한시적

인 유예기간을 주고 정부의 축산업 지원시 규모별로 차등 지원 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수반될 경우 규제철폐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 축발기금 등의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규모 미만의 규모화된 축산농가, 부업농 및 취미농,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 등의 순으로 지원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양돈·양계 전업농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